

21세기 주체 형성을 위한 신기획 시민 되기와 시민 만들기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함석헌이 외쳤던 “생각하는 백성”이 드디어 나타난 것인가?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놀랍다. 여론조사나 정치평론 전문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과 수준으로 ‘민의 마음’은 표출되었다. 난공불락 같았던 지역 주주의 벽도 상당히 허물어졌고 만년 여권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야당 신인이 당선되었다. 가히 선거혁명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이 변화를 가져온 주체인 ‘민’ 누구인가? 이들은 지속적인 실체를 갖고 앞으로도 주도적 힘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한 현상을 일으킨 일시적인 무정형의 무리인가?

1. 알파고와 총선

선거를 얼마 앞둔 시기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적 바둑전이 개최되었

다. 인공지능에 맞서는 한국의 한 젊은이에게 동류의식을 느낀 때문인지 한·중·일의 바둑기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이세돌 기사에게 깊은 연대감을 표시했다. 이세돌이 3연패 이후 마침내 1승을 거두자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이 함께 환호했고 언론들은 ‘인류’의 자존심을 세운 쾌거라 전했다. 갑자기 등장한 ‘인류’라는 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한 범주로 생각하는 고결한 언어다. 예상을 뛰어넘은 알파고의 능력 앞에 문득 인간으로서의 동류의식, 인류 문명의 동시대성을 잠시나마 확인한 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이 세기의 대결이 끝나자 인류라는 말은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졌다. 대신 대립과 갈등, 위기와 테러의 소식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인류공동체는커녕 같은 지역 내에서도 종족과 문화, 종교와 이념의 장벽을 더 높게 쌓자는 주장들이 시끄럽게 들려온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인종차별적 언사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중국의 시진핑은 인류의 꿈 대신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한다.

총선의 시기를 지나면서 ‘국민’이라는 말도 귀 따갑게 들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자는 주장, 국민을 위한다는 수많은 정책, 국민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명분 등에 국민은 빠질 수 없는 말로 등장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취업난과 경기 위축으로 삶이 고달파진 사람들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비방에 대응할 때, 또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우경화의 길을 내딛는 아베정부를 비판할 때, 국민의 정서와 자의식은 핵심적 자산이다. 주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에서 잠시 국민 대접을 받는 호사를 누리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의 자극 앞에 국민감정을 표출하면서 연대감을 확인하는 카타르시스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국민은 다시 장롱 속에 갇히고 신심 없는 제사마냥 공허한 언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파고와 4·13총선이 환기시킨 인류와 국민은 신기루일까? 내가 그 일원이라고 느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했던 경험은 일시적 환상에 불과

할까? 인공지능이라는 전대미문의 힘을 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공동 운명을 자각한 순간이 허상일 순 없다. 또 투표장에서 집권 정당과 권력자들을 심판한 주권자로서의 존재감 또한 분명한 실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염려하는 고담준론은 오늘 전 지구적 경쟁 속에 내몰린 개인들에게 힘을 주기에는 너무 멀다. 국민이라는 말 역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에 휘둘려 가난의 대물림을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형편과는 거리감이 있는 언어다. 어떻게 해야 인류와 국민을 호명하는 소리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고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인가?

2. 시민 - 해답의 단초

그 해답의 단초가 ‘시민’에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 특집의 문제의식이다. 시민은 인류나 국민과 달리 우리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다.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개별자들이고 함께 투덜대고 대화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동시대의 이웃이다. 열광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싸우고 결별하기도 하는 걱정적인 사람이어서 인류와 국민의 내부에 균열을 내는 자들이다. 개별자로서의 특성, 대립하는 견해로 인해 비판과 성찰을 가능케 하면서 동시에 시끄러운 소리와 부딪치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시민이다.

시민의 특징은 개성과 자율에 있다. 시민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고유한 인격, 결정권, 희망과 판단을 중시한다. 보통사람들이어서 돈과 권력에 약한 속물적 욕망을 숨기지 않지만 고상함을 바라는 교양도 있고 계기가 주어진다면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선포 희생하기도 한다. 탐욕에 충실한 이기적 속성과 함께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고 비용을 치를 용의도 있다. 시민에는 진보적 사람도 보수적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포함된다. 종족이나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은 세계주의적 시민도 있지만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 감정을 숨기지 않는 시민도 있다. 시

민에 내재하는 속물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속성을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와 국민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섯 편의 글은 각기 한국, 유럽, 중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민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목한다.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현실들을 해결하려면 책임의식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동굴 밖으로 나서야 한다고 송호근은 설파한다. 교양보다는 출세에 집착해온 중산층의 동력이 시민적인 것으로 치환될 수 있다면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이현재는 확대되는 여성운동 속에서 시민성의 작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소비의 정치화, 사적 이슈의 정치화를 통해(‘여성화된 시민운동이 공/사, 보편/특수, 체계/생활세계,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변형적으로 재구성된 여성성과 여성주의적 덕목이 모든 시민의 규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혁태는 일본이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와 근대주의에 기초하는 시민사회론에 기대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운동과 이념을 발전시켜왔음을 지적한다. 조경란은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이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검토한다. ‘민주, 문명, 자유, 평등, 법치’와 같은 말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이면에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중국적 수용이 확대되는 변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밝힌다.

시민이란 존재는 유럽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한다. 시민혁명, 시민권,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발달은 근대 유럽의 한 특징이면서 전 지구적 근대의 한 양상으로 자리매김되었고 사회과학으로 이론적 지위를 획득했다. 박근갑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자유민을 지칭했던 시민 개념이 중세의 제3신분을 거쳐 시민혁명의 주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검토하면서 역사상 시민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정리한다. 이들은 “사회생활의 전체 영역에서 경쟁, 개인의 성취, 성실과 근면, 합리성, 합법성을 존중하는 시민적 가치관이 생성”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역사 속의 시민은 교양과 속물성, 사익과 공익, 자유와 노동 사이에서 자기모순과 균열을 늘 지니는 자들이어서 무조건

적으로 시민을 이상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시민이 중요하다고 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이식하는 것처럼 시민을 창출할 수는 없다. 시민은 구체적인 역사 과정을 통해, 오랜 관행과 전통을 뚫고, 시대적 환경과 생태학적 조건을 타고 형성되는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투쟁도, 타협도, 혁명도 일어나며 기대와 좌절 또한 반복되게 마련이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시민의 존재는 언제 어떻게 부각되고 성장했는가,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시민은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인간사의 아이러니를 예민하게 포착하면서, 동시에 시민이란 주체 등장 of 세계사적 보편성을 포착하는 복합적 시선이 절실한 것이다.

3. 세 번째 계기? 네 번째 계기?

동북아시아에서 시민과 시민사회가 문제시된 계기는 역사적으로 세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시민 개념이 동아시아에 유입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시대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근대적 개념과 제도, 쟁점과 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한 때로서 코젤렉(Reinhard Koselleck)의 표현을 빌다면 ‘안착기’에 해당하는 시점이다. 오랜 중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일본이 주도하는 근대적 지역질서로 변화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격동기였다. 이후 일본은 아류 제국주의로 이 지역의 패권자로 부상했고 유럽의 변방인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근대 개념의 안착기였지만 현실은 근대의 부정적 측면들, 침략과 억압과 전쟁과 혁명이 분출한 시대였다. 이 시기에 시민이란 말이 소개되었지만 민족이나 국민에 압도당해 별다른 힘을 얻기 어려웠다. 송호근은 한국의 시민이 이 시기 태동했지만 동굴 속에 갇혔다고 했다. 중국의 량치차오(梁啓超)도 국민과 신민을 강조했을 뿐 시민은 주목할 여유가 없었다. 1920년대 자유민권 운동으로 자유주의의 일시 확장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민권은 국권에 억압

당했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보편 범주의 힘과 자부심이 최우선의 열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민족주의가 강력한 정당성을 지니게 되었으니 국민의 과잉이 나타날 조건은 이때부터 조성된 셈이다.

두 번째 계기는 탈식민과 국가 재건이 진행된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친 시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일본제국은 해체되고, 해방과 민주, 자유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시민의 약동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중국의 내전과 공산혁명, 한국전쟁 및 전 지구적 냉전이 이어지면서 동북아에서 시민은 동굴 밖으로 나올 환경을 맞지 못했다. 시민과 시민사회는 자유주의, 근대주의의 주요한 화두였지만 특이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굴절되었다.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었던 일본에서 시민 논의가 강한 힘을 지닐 수 있었고 전후(戰後) 민주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한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권혁태가 언급한 무라하치부(村八分) 사건에서 보듯, 일본의 시민론도 ‘몸과 마음의 분리’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자유주의의 가치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정권에서 시민논의가 정치적 중요성을 얻기는 더욱 어려웠다. 미국의 영향하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수용된 한국사회에서도 반공과 냉전의 논리가 허용한 공간은 매우 협소했다. 1970년대 한국의 한 시인이 “시민은 목하 입원중”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시민의 불구성, 연약함,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세 번째 계기라 할 1990년대 이후의 시점이야말로 비로소 시민, 시민의식, 시민사회의 논의가 동북아의 변화와 맞물려 시대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때다. 탈냉전과 세계화, 정보화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난 때다. 소련의 해체 이후 탈냉전의 영향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했고 동구권의 체제 전환은 내부 동력으로 시민사회를 다시 주목하게 했다. 전 유럽에서 진행된 민주화, 탈국가화, 통합화의 흐름은 전통적 국민이나 민족이 아닌, 시민과 시민권을 중시하는 관점들을 강화시켰다. 동북아에서도 천안문사태, 북한의 위기, 한국의 민주화, 중산층의 대두 등이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이념의 소멸을 부르짖는 낙관주의가 탈산업사회의 문제의식과 맞물리면서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이 부각되었고 그 주체로서 시민층, 시민조직, 시민단체가 각광을 받았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1990년대는 시민운동, 시민단체, 시민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나타난 시기로 막연한 피지배층을 가리켰던 민중이나 민족, 국민의 범주와 구별되는 자각하는 시민,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 주체적 시민, 탈계급적 시민이 강조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등장한 시민 논의와 시민적 주체는 비교적 명확한 미래 전망, 기대 지평을 지녔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화, 자율화, 개성의 존중, 자율적 결사체, 다양성의 옹호, 국가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동구권을 무너뜨린 세계사적 동력이 시민사회에 있다는 확신,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힘도 동독 시민들의 체제 변혁 역량이 었다는 평가,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자신만만한 세계화와 정보화를 가능케 했다는 자부심 등이 시민 논의 속에 담겨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 시민적 지향성도 나타났는데 시민사회의 확장이 국가 경계를 넘어 광범위한 연대를 증진시킨 유럽연합의 경험이 주목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한중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냉전 구도에 큰 균열이 나타났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공유되고 한일 간에 다양한 민간 교류와 공동 행사들이 만들어졌다. 이 흐름 속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가 동북아시아 공통의 쟁점이 되고 전 세계 여성운동의 공통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일본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했다. 기후 문제나 환경오염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노동운동 이외의 여러 신사회운동이 국가 단위를 넘어 확장되어 평화, 여성, 인권,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시민활동의 영역이 출현했다. 부산과 후쿠오카와 상하이로 잇는 도시연합에 대한 논의도 나타났고, 제주, 오키나와, 타이완이 동아시아 평화라는 가치를 매개로 상호 연계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학계에서도 전 지구적 시민연대에 대한 논의와

노력들이 생겨났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이후 겪는 다양한 사회 문제, 도시 문제, 인구 문제, 불평등 문제들을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2016년 오늘 다시 시민을 묻는 이 기획은 세 번째 계기의 연장선에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네 번째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물음은 진지하게 앞으로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그 첫 출발점으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화두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나 문화는 상호 의존과 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되는데 정치와 안보는 여전히 국가 단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동북아의 현실을 지칭하는 이 말은 시민과 시민의식을 논하는 데도 유효하다. 1990년대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동북아 각국에서 시민과 시민운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포섭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겨우 부화한 시민이 허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일본의 시민은 곳곳에 흩어져 다시 민족과 국가를 부르짖는 우경화 세력에 포섭되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시장화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억압적 통치는 시민적 존재의 태동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가장 다이내믹하고 선거혁명을 논할 정도인 한국의 경우도 시민은 광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동굴 앞에 머뭇거린다. 시민 논의는 꽤 활발하고 스스로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개인과 단체, 활동도 적지 않은데, 시민은 왜 국민과 국가, 민족의 강한 호명 앞에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가?

이런 상황은 동북아 차원에서 공유할 사상적 자원이 결핍된 것과는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 결핍의 빈자리에 내용 없는 보편론이나 원초적 민족감정, 아니면 집단적 이기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 남북관계를 냉전적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가권력의 이상비대화 현상을 목도하는 한국의 현실은 그 같은 징조를 잘 보여준다. 중국에서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요소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이를 유교적 논리로 치환하고 국가중심성을 고수하려는 왕후이(汪暉)의 주장 역시 중국의 주류적 입장이 국가적 경계를 넘

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베의 일본이 보여주는 역사 우경화의 심리적 바탕에는 유럽 근대의 사상자원을 자국중심적으로 변형시켰던 메이지 시기의 국가주의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들에게 시민과 시민의식은 국가나 국민의 틀을 뛰어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뛰어넘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민간 교류와 비정부적 활동이 지역시민으로서의 유대감이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의식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아시아 패러독스는 해소되지 않고 이 맥락에서 국민의 과잉은 지속된다. 국경을 넘어서 연대할 수 있는 시민적 품성, 마음의 아비투스(a)가 마련되지 않을 때 시민은 손쉽게 국민에 종속될 것이다. 국가에 전유된 유교사상, 발전주의, 민족정서, 집단 자부심을 어떻게 넘어서는 것인가? 시민정체성을 근거로 영토와 문화, 시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횡적 연대가 동북아에서는 형성될 수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과 시민의식, 시민운동은 어떤 지향성을 지녀야 할까?

4. 숙제들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숙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시민의 핵심이 자율과 개성, 소유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 주체성, 기본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국가의 법적 질서 속에서만 그 실질적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시민은 공공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국가권력에 포섭되거나 이와 갈등할 수도 있다. 개인의 천부인권적 자유권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 한가? 국가권력은 어떤 조건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가? 개성의 표출과 집단적 규범 사이 긴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익의 추구를 시민적 자유로 포장하고 욕망의 무한 표출을 개성으로 강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결국 시

민의 자유가 속물화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운동론적 시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역시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유의 자기존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둘째로는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소공동체와 결부되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중간범주, 가족, 마을, 종교시설, 학교, 직장, 정당, NGO 등의 집단주의는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와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 이들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님비현상이라고 비난하는 지역 주민의 이익 수호 운동, 지자체별 개발주의, 사이버 종교단체의 활동은 시민적 영역의 확산인가 아니면 퇴화인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부지런한 이익 추구 행위는 어디까지 공공적이고 어디까지 속물적인가? 이러한 물음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프랑스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면서 던졌던 문제의식과도 상통한다. 또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유교의 평가, 친후이(秦暉)와 왕후이의 논쟁이 담고 있는 쟁점이고 일본 무라하치부 사례에서 보이는 ‘몸과 마음의 분리’ 문제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불법체류자와 같은 소수자의 권리 주장은 시민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큰 숙제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지역주의, 지역감정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셋째로는 시민의 자율성이 노동의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쟁점을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의 한국 시민사회론은 전통적인 계급운동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운동의 탈계급화를 중시했다. 환경 문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시민운동으로 부상했고 그 주체의 비계급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노동운동이나 노동계급은 시민운동 및 시민세력과 별개 또는 대립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유럽의 교양시민은 노동 문제에 열린 관심을 보였고 일본의 시민사회론도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문화시민의

교양과 노동자층의 계급성을 결합함으로써 시민적 영역이 확대될 수 있었음을 박근갑의 글은 보여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사회는 시민의 물질적 기초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깊이 궁구해야 한다. 시민의 자율성은 재산권에 있었고 그것은 흔히 중산층이라 이름하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 토대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보편화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하며 계층 상승의 기회가 크게 제약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시민적 자율, 시민의 주체성을 담보할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새로운 과제다.

마지막으로 시민성이라 불리는 품성, 덕성, 마음의 창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교양시민이라 불렀던 유럽의 시민들이 인류 보편에까지 사과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자발적 규율, 시민적 덕성, 시민윤리라 이름할 ‘마음의 체제’를 구축하게 만든 어떤 미시적 기초, 문화적 토대가 있었다. 송호근은 이것을 자발적 결사체에서 찾았다. 학교나 마을, 교회나 직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도 자발적인 모임, 토론, 타협, 갈등의 경험들이 결국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사회적 기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신을 중시하는 유교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일견 이해되기도 하는데 과연 국가적 이데올로기 교육과 시민윤리의 함양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교양의 가치도 유교적 덕목도 힘이 약하고 오직 물질적 성취와 세속적 성공의 가치가 유독 강한 힘을 행사하는 현대 한국에서 “경제적 안정, 충분한 여가, 자립과 자조의 정신(……) 물질적 성취와 도덕적 진보가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이 가능할 것인가가 큰 숙제다. 결국 이 문제들은 다시 인간 자체, 실존적 개인의 자아인식으로 되돌아온다. 인류, 민족, 국민, 시민의 정체성과 그들의 상호연관은 한 생명으로서의 개인,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명제로 연결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5. 주체의 연쇄

2016년 우리의 봄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연이어 돌출하고 있다. “수소폭탄의 실험 성공”을 자랑하는 북한의 핵도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의 제재안을 불러왔다. 평양발 말의 폭탄과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언사 속에서 시민적인 것을 찾기란 연목구어일 지경이다. 개성공단은 가동 10년 만에 폐쇄되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고 남과 북은 연일 전쟁을 연상케 하는 험한 설전이 오간다.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일상의 영역에 걱정과 염려를 심화시킨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그들의 어깨는 쳐져 있다. 인류도 국민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키워가는 냉정한 인물들에 대한 언짢은 거부감과 묘한 선망의식이 공존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접한다.

돌이켜보면 한반도는 자주 ‘외우’와 ‘내환’으로 시달렸다. 지정학적 특징 때문인지 중국, 일본, 미국, 소련이 강한 외세로 작용했고 친중, 친일, 친미, 친로를 앞세운 내부 대립과 갈등으로 힘들었다. 불현듯 찾아온 해방공간에서는 ‘외환’이 ‘내우’를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같은 조건 속에서 역설적으로 외우와 내환을 극복하려는 강한 ‘주체’가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민족혼을 호명하고 조국을 불러내며 계급의식이 자라난 것은 그러한 주체 형성의 일면들이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동력이 된 민주화의 꿈, 민중적 주체, 강력한 연대감 역시 내환과 외우에 대응하면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시대적 노력의 소산이었다. 1990년대 시민의식의 분출 역시 민주화 이후의 시대, 세계화의 열린 공간을 바라보며 다양한 주체의 재구성을 모색한 결과다. 그런 점에서 국민도, 인민도, 민족도, 시민도, 민중도, 개인과 계급도 나름의 주체 형성의 노력 속에 일정한 역할과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문제는 시민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범주들이 충실해지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시민은 그 개별성과 다양성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고 민족을 유연

화하고 개인에게 교양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적 유대로 계급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 연대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미발달, 시민성의 미성숙은 안타까운 일이다. 스스로 시민이라 하면서도 교양과의 결합도 마다하고 노동과의 연결도 회피하면서 속물적 이익에 주력하는 시민의 타락 현상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시민의 일상적 기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을 통해 건강한 시민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이지만 그 자유는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회학적 명제, 개인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상함을 지님과 동시에 악마와도 가까워질 동물적 욕망을 지닌 자라는 양면성을 직시해야 한다. 인간은 역사를 만드는 정치적 주역이지만 주어진 구조적 한계 속에서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품성, 인류 공동체에 대한 열린 감각,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연대적 책임의식 등은 주체의 다면적 성격에 대응한다. 개인-시민-국민-인류라는 범주들은 일직선상의 선형적 포함관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순환적 관계다. 이 순환적 고리를 이으려면 인류와 개인이 그 의식과 행동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21세기 기후변화나 생태 위기는 인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일상 문제로 자각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는 개개인이 구체적 삶 속에서 부딪치는 위기로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다. 유럽에서 난민의 문제가 시민의 문제로 부상하면서 극우 진영이 정치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 인류애가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일수록 ‘인류적 사고’가 나타나지 못하는 세계의 위험을 ‘바둑’을 빌려서나마 그런 감정의 일단을 공유하는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알파고의 존재는 개인의 실존과 인류 공통의 과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말하고 있다.

시민을 생각하는 것은 시민 아닌 것과의 차별을 의식하는 것이다. 시민

은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신분적 차별을 넘어서 개인의 권리를 확인해온 역사적 주체다. “나는 시민인가?”라는 질문, “시민의식을 지니자”라는 말 속에는 독특한 자격과 품성을 지닌 개인, 역사를 주도하는 적극적 의지가 전제된다. 시민은 시끄러운 존재고 살아 있는 목소리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옹호하는 사람, 북한을 비난하는 사람과 대북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모두 시민이다. 인류나 국민의 일원으로 당위적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주장들을 내는 자들이다. 시민은 국민에 대립하거나 인류와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와 국민과 개인의 내면을 풍요롭고 내실 있게 만든다. 개인과 시민과 국민, 인류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는 의미의 연쇄 속에 위치해 있다. 온 산하를 푸르게 물들이는 봄의 기운이 수많은 새싹들, 잡초들, 봄꽃들 속에서 자라나듯, 모든 살아 있는 개인들의 마음과 일상, 그들이 만나고 부딪치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주권자로, 시민으로, 인류의 일원으로, 그리고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민의 시대를 위해 다시 우리의 안팎을 돌아보고 새 각오를 다짐해볼 일이다.

박 명 규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회사, 남북관계, 민족주의, 개념사 연구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버드연청연구소, UC 버클리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을 맡아오고 있고 2010년 이래 한국연구재단의 HK 평화인문학 연구단을 책임지고 있다. 2014년 이래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한독 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포스트-김정일시대의 통일평화 구상』(2012),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2009),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2013), 『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공저, 2010), *Civilizing Emotions: Concepts in Nineteenth Century Asia and Europe*(공저, 2015) 등이 있다.

원고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원고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지평 20

知平 2016

발행인 | 대우재단

편집인 | 이태수

편집위원 | 김광역, 김병연, 김승환, 김혜숙, 노정혜, 김용준, 김두철

편집주간 | 박은진

발행일 | 2016년 5월 25일

☒ 『지식의지평』은 대우재단이 국내 학문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발간합니다.

☒ 게재된 내용은 대우재단 및 편집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